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인쇄/1998년 3월 9일

발행/1998년 3월 12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환경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34-6

3,000원

연구보고서 97-2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 영 춘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과 식량난 및 에너지난,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탈북현상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장래에 대한 최근의 일본 시각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김정일 정권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론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크게 안정론,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붕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안정론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강력한 통제체제 유지, 주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그리고 한국의 북한 조기붕괴 불원(不願) 등이다.

「오카자키연구소」 소장인 오카자키(岡崎久彦)와 나카지마(中嶋嶺雄) 東京外國語大學 교수는 북한이 철저하게 통제된 경찰국가이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강력한 북한 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시게무라(重村智計) 毎日新聞 논설위원에 의하면 북한이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반대세력 등 정권 인수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쿠데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현대코리아연구소」 소장인 사토(佐藤勝巳)와 평론가인 하세가와(長谷川 慶太郎)는 한반도의 주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북한의 조기 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체제

의 존속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계무라는 미국의 동북아 안정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자신의 우산 속에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 있으므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되는 조건은 중국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포기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인데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당분간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갑제와 구로다(黒田勝弘) 전 産經新聞 서울지국장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한국이 북한의 급작스런 조기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동기로서 북한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변화속의 국가존속론은 안정론과 붕괴론의 절충입장으로서 북한은 현재 제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로 인해 체제나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개방정책과 대미·일 관계개선 등 정책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를 그럭저럭 유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고마키(小牧輝夫)와 게이오대학(慶應大學)의 오코노키(小此木政夫) 교수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붕괴론

북한 붕괴론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및 북한이라는 국가자체의 붕괴로 대별된다. 김정일정권의 붕괴근거

는 개혁·개방의 난망, 김정일의 신비성 결여,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폭동 및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가미야(神谷不二) 前 慶應大 교수는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 정권, 즉 김일성이 만든 김왕조(金王朝)는 수년 이내에 종말을 고할 운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김정일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급격한 개혁·개방정책은 오히려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가인 세키가와(關川)와 구로다(黒田勝弘) 産經新聞 기자는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을 ‘신홍 종교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에는 신홍 종교국가의 구심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朝日新聞(1994. 7. 10) 사설은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특히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왕조 몰락의 역사는 독재체제가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독재는 반드시 붕괴한다”고 시사하였다.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보는 일본 시각의 근거는 구조적인 식량난과 이로 인한 탈북자의 증가, 김정일 권력기반의 미비,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 등이며, 이로 인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넘어서 체제까지 붕괴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애(野副) 亞細亞大 교수는 북한의 체제붕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는 군사비이나, 북한은 군사비를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인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자체의 붕괴가능성을 내부폭발에 의한 붕괴와 대남도발에 의한 붕괴로 상정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1996. 2. 27)에 의하면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승계 이전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붕괴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가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은 ①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

지 부족, ② 망명자의 증가, ③ 사회혼란, ④ 북한정권의 자포자기적 인 행태 등 분열의 조짐에 근거하고 있다. 고타니(小谷豪治郎) 교수는 북한이 체제모순과 내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남도발에 의한 붕괴와 관련, 시가다(志方俊之) 帝京大 교수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 연합군은 서울을 사수한 다음 평양을 점령한 이후 흥남-안주선에서 북진을 정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가다 교수 뿐만 아니라 「防衛研究所」의 다케사와와 朝日新聞 등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비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가운데 주목을 끄는 점은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시각이 최근 일본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시각은 냉전종식 이후 일본의 정치 및 외교전략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신진당 당수 오자와(小澤一郎)는 ‘보통국가론’을 제시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수행, 즉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 핵문제와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 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김일성 사후 일본의 주요언론과 잡지들은 일본이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이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새로 만들기 위해 상정한 한반도 및 대만 유사를 일본의 역할확대, 즉 정치대국화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목 차 -

I. 서 론	1
II. 김정일 정권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론	5
1. 강력한 통제체제 유지	5
2. 미·중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6
3. 한국의 북한 조기붕괴 不願	8
III.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10
IV. 붕괴론	13
1. 김정일 정권의 붕괴	13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19
3. 북한의 붕괴	22
4. 붕괴론의 평가	34
V. 결 론	39
참 고 문 헌	41
< 부 록 >	45

I. 서론

냉전종식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직후 외교적으로 고립된 바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한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 식량난과 에너지난,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탈북현상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외적 관심과 관련, 미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북한 '연착륙'(soft-landing)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연추락'(soft-crash) 밖에 없다고 여기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이 거의 근접해 있다"¹⁾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오는 탈북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앞으로 춘궁기에 10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하여 국경지역에 격리 수용소를 지정했다고 한다. 일본도 한반도 유사시 탈북 난민들이 어선으로 하룻밤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자국 영토에 대거 몰려올 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가난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구소련과 동구 국가들에서 일어난 사태를 경제난으로 인하여 붕괴된 사례라고 보아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제 북한 정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이에 따른 탈북행렬, 모든

1) 「朝鮮日報」, 1997. 4. 12.

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산업의 정체, 부정부패의 만성화, 사상모순의 증대, 군대규율의 문란, 배급제도의 와해 등 대내적인 제반문제들을 감안할 때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반면, 북한이 총체적 위기상태에 있지만 일반주민은 가난과 식량 위기에 익숙해 있으며, 내핍생활에 대한 내구력이 강하고, 통제에 쉽게 복종하기 때문에 식량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제한적 개방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란과 군부 쿠데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정치적 불안정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김정일 정권이나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외부이면서 동시에 내부로 느껴지는 특수한 실체인 북한장래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을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의 유명한 저널들인 「文藝春秋」, 「中央公論」, 「世界」, 「諸君」, 그리고 주요 일간지인 「朝日新聞」, 「毎日新聞」, 「讀賣新聞」 및 「日經新聞」에서 북한체제의 존속여부와 관련된 사실, 칼럼 등의 내용을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부터 1997년 말까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신문들은 동구권과 구소련 붕괴시 북한장래에 대하여 논평을 거의 신지 않았으며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사실과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본 언론매체들의 정치적 동기가 북한의 민중에 대하여 침묵한다든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조총련의 항의·시위 등을 의식하여 기사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²⁾

2) 田中 明·佐藤勝己, “金正日體制の崩壊は早い,” 「諸君」, 1994. 9, pp. 51~52 참조.

일본의 주요 3대신문에서 전통적으로 「朝日新聞」은 좌파성향이 있고, 「讀賣新聞」과 「日經新聞」은 우파성향, 그리고 「毎日新聞」은 정치적 중립의 경향이 있다고 한다.³⁾ 그리고 저널의 성향에 있어서 「世界」, 「諸君」은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⁴⁾ 필자는 또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신문과 저널들이 북한의 장래를 어떻게 상이하게 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북한의 위기수준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변화의 다양한 의미가 규명되어야 한다. 정치학자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변화는 권력엘리트, 체제, 총체로서의 체계라는 세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⁵⁾ 따라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수준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일 정권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권력엘리트의 교체이다. 둘째는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고 주체사상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및 붕괴이다. 셋째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로서 북한이 자멸하거나 대남도발 이후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패망하여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것이다.⁶⁾

또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고 전망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붕괴'라는 용어는 급격한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

3) 福田恒存, 「新聞のすてて」(東京: 高木書房, 1975); 片岡正巳, 「朝日の論調ごころが納得できない」(東京: 日新報道, 1981).

4) Richard Halloran, *Japan: Images and Realities* (New York: Alfred, A. Knope, 1969), p. 71.

5)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 Fall 1973, pp. 295~300.

6) 김성철은 Easton의 권력엘리트, 체제, 체계의 개념을 북한의 변화에 적용하였다. 김성철, "김일성 정권의 변화전망," 「김정일 정권의 향방」(민족통일연구원 제18회 국내학술회의, 1995), pp. 8~9; 小谷 姫路學院女子短期大學 學長도 북한의 붕괴를 정권, 체제, 국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小谷豪浩郎, 「東アジア再編: 日本の戦略」(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97), pp. 244~246.

4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의 영역 또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용어이다. 예를 들어 '붕괴'라는 용어를 북한에 단순히 적용할 경우 이것이 김정일을 둘러싼 엘리트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체제의 총체적 해체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붕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어느 수준의 붕괴를 의미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전체의 문맥을 보아 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상기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또한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 본 논문의 제II장에서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안정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안정론과 붕괴론의 절충입장으로서 '변화 속의 국가존속론'이 다루어졌다. 한 국가의 변화여부를 단순히 안정과 붕괴라는 이분법으로만 규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IV장에서는 붕괴론을 전술한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북한의 붕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붕괴론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특별히 주목하여 평가하였다.

II. 김정일 정권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론

안정론의 주요 근거는 북한의 강력한 통제체제 유지, 주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그리고 한국의 급작스런 북한 조기붕괴 불원(不願) 등이다.

1. 강력한 통제체제 유지

「오카자키연구소」 소장인 오카자키(岡崎久彦)와 나카지마(中嶋嶺雄) 東京外國語大學 교수는 북한이 철저하게 통제된 경찰국가이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볼 때 통제된 국가의 붕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세인의 바스당은 통제된 비밀결사조직이기 때문에 강인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바스당보다도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북한 노동당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⁷⁾

일본 방위청 산하 「防衛研究所」는 1996년 12월 「동아시아 전략개관 1996-1997」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군과 당에 대한 지배가 확고해 북한체제가 예상외로 내구력이 있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북한체제가 종국적으로는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승계하지 않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김정일 실각설'이나 '테크노크라트 실질 지배설' 등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⁸⁾

시게무라(重村) 毎日新聞 논설위원에 의하면 사회과학적 개념상 권

7) 岡崎久彦·中嶋嶺雄, 「日本にアジア戦略はあるのか」(東京: PHP研究所, 1996), pp. 149~152.

8) 日本防衛研究所, 「東アジア戦略概観 1996-1997」(東京: 防衛研究所, 1997). 이 내용을 「毎日新聞」이 1997년 1월 16일자에서 인용·보도하였다.

6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력체제의 붕괴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구소련의 민주화와 유럽의 압력으로 실현되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작용하여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면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란에서 팔레비 정권이 붕괴했을 때에는 이슬람교라는 대안세력과 정권을 인수할 집단(호메니)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에는 강력한 통제체제로 현재 반대세력 등 정권 인수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쿠데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지도자의 병사나 암살이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할 지라도 즉 김정일이 죽는다 할 지라도 북한은 지도자만 교체하여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⁹⁾

2. 미·중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현대코리아연구소」 소장인 사토(佐藤勝巳)와 평론가인 하세가와(長谷川 慶太郎)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볼 때 한반도의 주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국익 때문에 북한의 조기 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존속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1996년 5월 제주도에서 한·미·일 3국의 외무차관보급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대립했다. 미국은 북한

9) 重村智計 著, 신지호 옮김,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 지식공작소, 1997), pp. 20~31.

10) 長谷川 慶太郎·佐藤勝巳, 「北朝鮮崩壊と日本」 (東京: 光文社, 1996), p. 91~92.

의 식량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붕괴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95년의 식량 지원으로 1996년 가을까지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이 회의 이후에 유엔의 제안에 따라서 미국이 최고 630만 달러, 일본이 600만 달러, 한국이 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시계무라에 의하면 “미국의 건국과정과 미국인의 가치기준에서 보면 식량부족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태로서 미국은 이를 인간이 견뎌나갈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다. 식량난이 도화선이 되어 폭동과 전쟁 등이 발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미국인의 사고방식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인도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기 쉽다는 사정도 있다.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힘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원하는 식량을 미국 농산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미국에게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¹¹⁾

또한 시계무라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 외교의 우산밑에 북한이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론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자기 우산 속에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 안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¹²⁾라는 것이 시계무라의 주장이다.

중국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켜본 후에 지원량을 결정했다고 한다. 즉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

11) 重村智計, 앞의 책, p. 61.

12) 위의 책, p. 109.

8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만일 북한이 붕괴하여 현재의 북한과의 국경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배치될 경우 상비병력을 대폭 증강 배치해야 하는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난민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중국외교부의 관리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식량난 때문에 대남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¹³⁾고 주장하였다 한다.

3. 한국의 북한 조기붕괴 不願

趙甲濟 구로다(黒田勝弘, 당시 産經新聞 서울지국장)은 한국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면 첫째, 인구비의 문제가 있다. 통일전 서독 인구는 6,036만명이었고, 동독 인구는 1,660만명으로 약 4:1이었다. 한국 인구는 4,496만명이었고 북한 인구는 2,380만명이므로 약 2:1이다. 즉 인구비로 볼 때 한국이 서독보다 북한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빈곤은 동독과 비교가 안된다. 당시 동독의 1인당 GNP는 10,000달러를 약간 넘었지만 북한은 400달러를 약간 넘고 있다.

셋째는 경제여력이다. 통일직전 서독은 세계최대 채권국으로 1990년에는 3,584억 달러의 순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약

13) 위의 책, p. 58.

1,000억 달러의 채무국이다.”¹⁴⁾ 그들은 이와 같은 경제력 부족으로 한국이 북한의 조기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갑제와 구로다(黒田勝弘)는 “한국주도의 자본주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남한을 동경하는 수많은 북한주민이 군사경계선을 넘어 남한에 오게 되면 한국은 심각한 곤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의를 정부가 차단하기도 하고 논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¹⁵⁾는 것이다.

시게무라는 “독일통일의 경우 국경선의 개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만일 한국이 지금 즉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에 대하여 군사경계선 철거를 제안하든지 일방적으로 군사경계선 해체를 선언하고 통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므로 한국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하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¹⁶⁾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력한 통제체제 유지, 주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 한국의 급작스런 북한 조기붕괴 불원과 같은 안정론의 주요 근거 이외에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시게무라(重村智計)는 “북한이 3년간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직후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은 6개월 안에 붕괴할 것이다,” “3년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한반도의 문화, 즉 유교의 전통과 ‘효행,’ ‘喪’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¹⁷⁾

14) 趙甲濟·黒田勝弘, “韓國は南北統一を望んでいない,” 「中央公論」, 1992. 1, p. 202.

15) 위의 글, pp. 201~202.

16) 重村智計, “21世紀 朝鮮半島の統一シナリオ,” 「東Asia Review」, 1997. 6, p. 3.

17) 重村智計, “北朝鮮崩壊論, 軟着陸論の見當違い,” 「中央公論」, 1997. 8, pp. 64~65.

Ⅲ.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변화속의 국가존속론은 안정론과 붕괴론을 절충하는 시각으로서 북한은 현재 제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로 인해 체제나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개방정책과 대미·일 관계개선 등 정책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를 그럭저럭 유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고마키(小牧輝夫)는 김일성의 유훈 및 김정일에 대한 대안 부재, 당·정·군의 견재, 미·중의 식량지원 등으로 인해 3년 이내에 김정일의 실각이나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고 현재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부정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폭이나 속도의 문제는 있으나 경제면에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착실히 진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 안에서 달러에 대한 환율을 2대 1로 현실화시키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이 지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허용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주민들은 생산, 판매, 서비스 등 개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이 지역에 인접한 도시로 중국과 국경을 사이에 둔 원정리에는 자유시장이 개설되었다.

북한은 원산, 남포 등에 보세가공지역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분조관리제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

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단행하고 있다. 북한은 인도적 차원의 국제 원조 등을 통해 극심한 식량난을 모면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로 완전해결이 어려울 것이며, 홍수와 기뭄 등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을 정치적으로 잘 통제하면서 경제를 현상유지시키고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당분간 정경분리원칙 하에서 한국과도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¹⁸⁾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북한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키의 견해이다.

게이오대학의 오코노키(小此木政夫) 교수도 북한의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과 관련,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족하나마 북한이 나름대로는 변화를 지향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존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⁹⁾

김정삼 「동북아시아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붉은기 사상'을 중심으로 오히려 체제를 더욱 결속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수년내에 체제붕괴 등 급변사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반체제세력의 부재, 사회주의건설의 고된 경험, 성분정책 등 주민통제체계의 원활한 작동, 중국의 김정일 정권 지원, 대미 및 대일 관계 진전 등의 요인에 힘입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 원조를 통한 복구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미·일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의 수

18) 1997년 7월 8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방문시 면담내용이다. 小牧輝夫, "喪明けて對話攻勢に向かう北朝鮮," 「世界週報」, 1997. 8. 12, pp. 48~53 참조.

19) 小此木政夫, "迫られる北朝鮮危機への對應," 「世界」, 1997. 9.

1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교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배상금이 북한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²⁰⁾

김정일이 1997년 10월 8일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한 직후 일본 주요신문들은 북한이 국가존속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지의 사실들을 게재하였다.

「朝日新聞」사설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 총비서의 선택은 김총비서 자신이 결정하여야 한다.... 붕괴촌전(寸前)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취하여 외국과 협조하고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리고 남북대화 와 북·일수교를 위한 교섭과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협조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²¹⁾는 것이었다. 「讀賣新聞」사설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등을 통해 제한적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측면에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²²⁾고 주장하였다. 「日本經濟新聞」역시 “북한은 폐쇄적 체제를 지양하고 만성적인 식량·경제난 해결을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여야 일국으로서 국가유지를 할 수 있다”²³⁾는 사실을 실었다. 「毎日新聞」사설도 북한은 심각한 식량·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하여야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에는 소위 「主體農法」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점진적 개혁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교면에서도 북한은 미·일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방정책을 취하여야 한다.”²⁴⁾

20) 1997년 7월 11일 오사카 「동북아시아문제연구소」 방문시 김정삼 이사장과의 면담내용이다.

21) 「朝日新聞」, 1997. 10. 10.

22) 「讀賣新聞」, 1997. 10. 9.

23) 「日本經濟新聞」, 1997. 10. 9.

24) 「毎日新聞」, 1997. 10. 9.

IV. 붕괴론

1. 김정일 정권의 붕괴

일본의 시각에서 김정일정권의 붕괴근거는 개혁·개방의 난망, 김정일의 신비성 결여, 3개의 난제(친인척과의 권력 암투, 혁명 1세대의引退문제,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폭동 및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가미야(神谷不二) 前慶應大 교수는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 정권, 즉 김일성이 만든 김왕조(金王朝)는 수년 이내에 종말을 고할 운명”²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장기적 안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김정일이 선두에 서서 김일성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장기독재자가 실각하면 반드시 후계자는 전체제(前體制)를 부정하였다. 소련의 스탈린 격하, 중국의 모택동 격하가 좋은 예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 체제에 대해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전체제(前體制)를 부정하고 차별화 정책을 추구하여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과 일체화되어 있고 체제를 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북한은 중국의 지원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김정일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급격한 개혁·개방정책은 오히려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25) 神谷不二, “金王朝終末と東アジア,” 『諸君』, 1994. 9, p. 30.

26) 神谷不二, “北朝鮮につけこまれるな,” 『諸君』, 1997. 5, pp. 30~31.

14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작가인 세키가와(關川)와 구로다(黒田) 産經新聞 기자는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을 '신흥 종교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경우 신이 아니고 신의 피를 받고 자란 보통인이다. 보통인은 어디까지나 신비성을 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예술적 천재' 등의 전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에는 신흥 종교국가의 구심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²⁷⁾

다나카(田中 明) 拓殖大 교수와 사토(佐藤勝己) 「現代코리아연구소」 소장은 '북한 안정론의 허구'를 주장하였다. 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김일성 사후 공석이 되어 있던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에 김정일이 취임하지 않았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취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취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⁸⁾ 사토 소장은 "김정일이 대단한 효자이므로 부친의 사망에 대해 유교(儒敎)의 예(禮)에 따라서 상복(喪服)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유교국가였던 이조시대에 왕의 후계자인 왕세자는 부왕(父王)이 사망하면 상복(喪服)을 입지만 왕위는 왕이 사망하자마자 곧 승계하였다고 강조하였다.²⁹⁾ 다나카 교수와 사토 소장은 이와 같은 '북한 안정론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정일이 직면하고 있는 3개의 난제를 제시하였다.

27) 關川夏央, "新興宗教國家・北朝鮮," 「諸君」, 1994. 9, pp. 36~44; 黒田勝弘, "金正日は「神」にはなれない," 「文藝春秋」, 1990. 9, pp. 86~87.

28) 佐藤勝己・田中 明, "北朝鮮「安定論」の虚妄を挑す," 「諸君」, 1996. 7, p. 105.

29) 佐藤勝己, "金正日に實權はない," 「諸君」, 1994. 10, p. 50~55.

첫째,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며, 이복 동생 김평일 및 숙부 김영주 국가부주석과 권력암투를 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 생존시는 김일성이 조정역을 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그러한 역할이 없어져 심각한 암투가 재연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 전반부터 김정일과 김영주의 권력경쟁에서 김정일이 승리하여 당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둘째, 구세대에 속하는 소위 '혁명1세대'의引退(인퇴), 즉 처리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직책이 변동한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 등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혁명1세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실제로 정권을 잡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제일 심각한 문제는 경제문제, 특히 식량문제이다. 식량문제가 심각해서 전쟁용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러시아 국영 TV의 보도가 일반 주민에게까지 전해지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이 김일성의 사망을 슬퍼하는 것은 김일성 사망 그 자체보다 자신들의 식료품, 의료품, 의복 등의 보급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다나카와 사토는 주장하였다.³⁰⁾

또한 다나카와 사토는 1996년 2월 주한미군이 작성한 북한의 7단계 붕괴과정에 의하면 북한은 제3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7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식량난이 일어난다. ② 중앙정부가 대상을 선별하여 자원을 공급한다. ③ 생존을 위협당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④ 중앙정부가 이것을 억압한다. ⑤ 내부항쟁이 일어난다. ⑥ 폭력을 동반한 균열이 일어난다. ⑦ 권력구조가 재편된다. 그들은 같은 유교국가인 중국의 '등소평이 몇번이나 실각 당하면서 反모택동 대열에 서서 개혁·개방을 시도하였지만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공산당 독재국가와 개인 독재국가라는 차이 때문이라고 밝히고

30) 田中 明·佐藤勝己, 앞의글, pp. 46~55.

16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있다. 즉 북한은 개인독재 국가이므로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¹⁾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의 권력장악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일본 내에서도 있었다. 김정일 후계체제는 반석위에 있고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시각이 당시의 주류를 이루었다. 김정일이 취임하고 있지 않는 그 자체가 김정일이 강력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 외무성 및 기타 정부기관들도 이 시각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도 있었다. 즉, 김정일이 주석에 취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조애(野副伸一) 亞細亞大 교수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후자의 시각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즉시 권력승계를 선언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도 국왕이 사망하면 왕자가 즉시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상복설을 반박할 수 있다. 둘째, 공산당 국가에서는 서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정일과 사이가 나쁜 계모 김성애의 서열이 김일성의 사망후 104위에서 14위로 급상승한 사실은 김정일이 서열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권력장악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1995년 10월의 군인사문제를 들 수 있다. 1995년 2월 오진우의 사망으로 공석으로 있던 인민무력부장에 최광 참모총장이 취임하고 다른 직책들에는 혁명 1세대가 진출하였다. 이것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 자신이 인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혁명 1세대에 밀려서 인사를 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물론 노조애 자신도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김정일이 정치·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절

31) 佐藤勝己·田中 明, 앞의 글, p. 110.

대권력자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³²⁾

작가인 安鳳善과 후카다(深田祐介)는 김왕조 붕괴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나누었다. “최근 북한은 식량과 연료부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식량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김정일은 강권을 발동하여 폭동을 진압하려 할 것이다. 이 와중에서 북한 주민들은 폭동에 동조하고 軍, 특히 청년장교단(일본의 2.26 사건³³⁾과 유사성이 있음)은 정당성이 결여된 김정일 정권에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³⁴⁾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武貞秀士)는 한반도 유사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쿠데타와 남침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는 식량난, 에너지난 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도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그 와중에서 2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내부결속 혹은 분열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① 남침, ② 체제강화, ③ 정책전환, ④ 쿠데타, ⑤ 정권이양 등 5개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경우는 쿠데타의 발생이다.”³⁵⁾

다케사다는 만일 김정일이 실각하거나 사망한다면 북한의 핵심은 없어지고 군부 등 대체세력도 사라져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옴 진리교가 붕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2인자가 없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정일의 측근인 제1세력은 중국에 지지를 요청할 것이며 제2세

32) 日本學術協力財團編, 「冷戦後のアジアの安全保障」(東京: 日本學術協力財團, 1997), pp. 161~163.

33) 1936년 2월 26일 도쿄에서 발생한 청년장교들의 쿠데타를 가리킨다.

34) 安鳳善·深田祐介, “95 金王朝崩壊のシナリオ,” 「文藝春秋」, 1994. 9, pp. 126~133.

35) 武貞秀士, “金王朝の内情とのシナリオ,” *By the way*, Vol. 6, No. 5, Aug/Sep. 1996, pp. 18~19.

18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력은 미국에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사태에 빨리 개입하면 중국도 개입할 것이며,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행동하기보다는 UN을 통하여 PKO를 만들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문제로 미국과 협상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또는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 내란발생시 한미는 상황을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고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케사다는 김정일 실각시 북한은 완전 붕괴할 것이며 북한의 난민이 중국으로 대량 탈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탈북난민을 보호·대우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유사계획(contingency plan)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³⁶⁾

일본 방위청 육상막료감부 조사부는 1996년 9월 「북한 붕괴 3단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현재 국민통제가 불가능한 2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국민에게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1단계(적색신호)를 넘어 국민통제가 불가능한 2단계(황색신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배급제도의 와해, 망명자의 증대, 정보통제의 이완, 사상모순의 증대, 군대규율의 문란 등이다. 동 보고서는 2단계 상황이 악화되어 3단계에 접어들 경우, 즉 노동자, 농민, 병사계층에서 아사자가 속출할 경우 이들은 집단폭동을 일으켜 이것이 내란 또는 쿠데타로 이어져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⁷⁾

김일성 사망 직후 「朝日新聞」 사설은 북한의 “독재는 반드시 붕괴한다”고 시사하였다.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특히 루마니아의

36) 1997년 7월 16일 武貞秀士와의 면담내용이다.

37) 「讀賣新聞」, 1996. 9. 15; 「世界日報」, 1996. 9. 16.

차우체스크 왕조 몰락의 역사는 독재체제가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북한의 중앙지도부는 김(金)일족으로 채워져 있다. 내부에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내부대립은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사태를 예측할 수도 있다. 국내경제의 심각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독재체제에 언제나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독재정권은 붕괴한다³⁸⁾는 것이다.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일본의 시각중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의 근거는 구조적인 식량난과 이에 의한 탈북자의 증가, 김정일 권력기반의 미비,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 등이며, 이로 인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넘어서 체제까지 붕괴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노조애(野副伸一) 亞細亞大 교수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붕괴까지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노조애 자신이 1995년 8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탈북자는 조선자치주도(州都) 연길에 450명, 연변 조선자치주(州) 전체로는 20,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탈북자는 권력의 소외계층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으로부터 특수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식량난 등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문제로 인하여 탈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식량사정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가뭄·홍수 등의 이유도 있으나 구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고 개선책이 거의 불가능하다.

38) 「朝日新聞」, 1994. 7. 10.

20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북한의 체제붕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의 하나는 군사비이다. 노조에 자신이 1995년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의 고위층으로부터 북한의 총예산중 군사비의 비율은 52%로서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미 군사통계국(ACDA)이 발표한 「93, 94년 현황」에는 북한 군사비/GNP 비율이 22% 이상으로 전쟁 중에 있는 보스니아-세르비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 군사비를 개선할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⁹⁾

「日本公社債研究所」는 199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국별 위험도(Country Risk, 10점 만점)가 최악의 수준인 2점을 밑돌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수준은 세계 최악에 해당되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파산국가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외국기업이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본다. 동 연구소는 북한이 최악의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북한이 체제위기 상태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회통제'와 '주체사상'이 주민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⁰⁾

스즈키(鈴木昌丸) 聖學院大 교수는 북한의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고위층 인사의 망명에서 보여지는 엘리트층의 이반이 군 내부의 반란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식량난으로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던 주민통제망이 이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북한체제는 내부적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39) 日本學術協力財團 編, 앞의 책, pp. 158~171.

40) 「産經新聞」, 1997. 10. 10.

무너지고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어 유교사회주의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⁴¹⁾

「아시아 군사분석그룹 21」도 북한의 정치·사회체제는 식량문제로 확실히 해체된다고 한다. 이 그룹에 의하면 “벌써 해체는 시작되고 있다. 현재의 체제가 길게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북한이 급후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의 시기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이다. 북한의 농업은 1995년 여름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집단농장에는 1인당 약 550g씩 식량이 배급되었으나 현재는 배급이 반 이하로 줄었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사정은 홍수, 가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농업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아가 발생하고, 이것은 폭동을 유발시키고 난민이 발생하는 등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⁴²⁾

이즈미(伊豆見元) 静岡縣立大 교수는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생존을 위한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개방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로의 개방이지만 그러한 개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남한 실상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며 개방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그와 같은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한다.⁴³⁾

41) 鈴木昌丸, “北朝鮮·金正日體制の今そこに ある危機,” 「世界週報」, 1997. 12. 9, pp. 6~9; 「朝日新聞」, 1997. 10. 9.

42) アジア軍事分析グループ21 (石川潤 等), 「アジア有事: 七つの戦争」 (東京: 二見書房, 1996), p. 70~73.

43) 伊豆見元, “일본의 대북한 정책,” 「평화논총」, 1997, 봄·여름, p. 98.

2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3. 북한의 붕괴

북한의 장래문제를 검토할 때 북한이 붕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고타니 교수 견해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라고 볼 때 정권(政權)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체(政體)만이 아닌 국가 자체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국가라는 이름이 있어도 국가전체가 기능마비의 상태에 있다면 이것을 붕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의 붕괴는 구체적으로 냉전의 종식으로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면서 소멸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일본인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를 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자멸하는 경우로서 일시에 수천명이 탈출하는 것과 같은 내부적 폭발이 뒤따른다. 둘째는 북한이 전쟁을 택하는 경우이다. 북한이 최후 수단으로 남침을 시도할 경우 엄청난 민족살상과 재산피해가 뒤따를 것이나, 북한은 한미 연합군에 의해 붕괴된다는 것이다.

가. 내부폭발에 의한 붕괴

「日本經濟新聞」에 의하면 김정일의 총비서직 승계이전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로 인해 붕괴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가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은 ①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② 망명자의 증가, ③ 사회혼란, ④ 북

44) 小谷豪治郎, 「東アジア再編: 日本の戦略」,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97), pp. 244~255.

한정권의 자포자기적인 행태 등 분열의 조짐에 근거하고 있다.⁴⁵⁾

고타니(小谷豪治郎) 교수가 말하는 자멸형(自滅型)은 「삼성경제연구소」의 통일시나리오로서 일본의 「世界週報」가 3주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미의 대북 봉쇄정책과 북한의 불안정 심화 → 북한의 리더십 약화와 쿠데타 성공 → 북한에서 정치권력의 혼란과 대량난민 발생 → 남한의 외교활동과 통일이라는 단계별 과정을 거쳐 3년에서 10년사이에 붕괴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북한이 체제모순과 내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여 한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형태로 통일이 되는 것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⁴⁶⁾

평론가인 하세가와는 냉전이 동측의 패배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도 결국 붕괴되어 세계의 공산제국이 완전히 해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 즉 미국과 한국 및 중국도 이러한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특히 하세가와는 북한이 자기파멸을 초래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존속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군사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시키지 못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붕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며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⁴⁸⁾

45) 『日本經濟新聞』, 1996. 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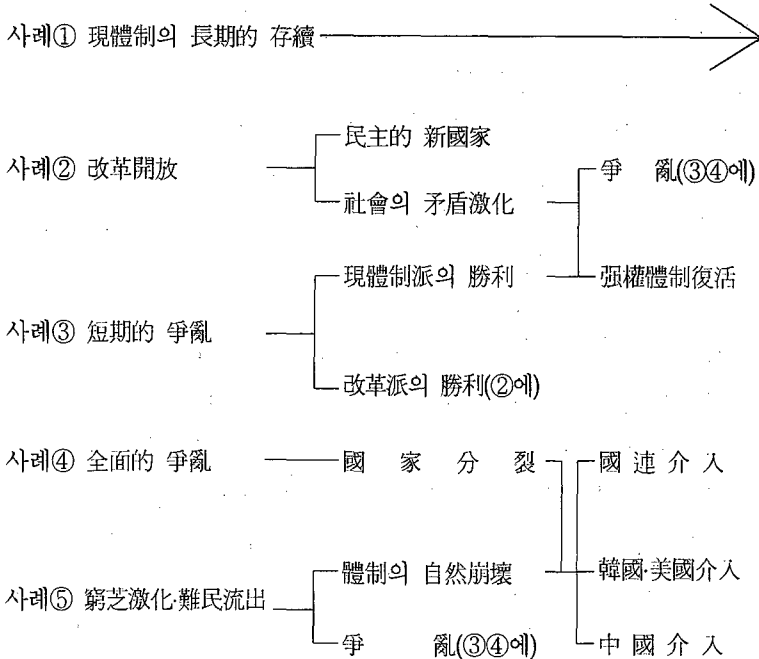
46) 小谷豪治郎, 앞의 책, pp. 253~255.

47) 長谷川 慶太郎·佐藤勝己, 「北朝鮮崩壊と日本」(東京: 光文社, 1997), p. 8.

48) 중국은 개방경제의 혜택으로 10,000명 정도가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십만명은 부패,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공산당에 대해 불만이 많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경제는 붕괴되어 사회질서가 마비·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세가와의 주장이다. 위의 책, pp. 91~93.

24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표 1> 北韓解體의 시나리오(戰爭以外)



「아시아 군사분석그룹 21」은 북한이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해체되는 양상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례①은 현재의 김정일 정권이 거느리는 조선노동당의 지배체제이나 이것은 경제·정치 구조적으로 존속하기 힘들다. 사례②는 북한 정권이 현재의 중국·베트남과 같이 경제의 개혁·개방정책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경우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완화하고 생산자본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며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강권적 지배체제 부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신지도층, 또는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민중에서부터 반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혁·개방체제의 존속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항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사례③, ④에 해당된다. 북한 내부에 정치·경제노선의 대립에서부터 구체제파와 신체제파간 분열 항쟁이 일어나 국가가 두 개로 분열되어 전면적 소란에 휘말릴 수 있다. 구체제파가 수도 평양에서 쫓겨나 북동부의 산악지대로 도망가 내전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민족성을 볼 때 일단 항쟁이 시작되면 철저히 적대시하고 분열되어 항쟁을 계속한다. 수습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분열된다면 주변 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량난민이 주변 제국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지도층의 노선항쟁보다 궁핍으로 인해 질서가 자연스럽게 붕괴되고 식료품이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민중이 국외로 탈출을 시작하는 경우가 사례⑤이다. 이 경우 수습의 방법을 놓고 지도층이 분열한다면 ③, ④의 사례로 이행된다. 또한 지도층이 이러한 분열을 수습할 수 없게 되어 국외로 망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문자 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다. 소란이 장기화된다면 국외탈출 난민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이다.”⁴⁹⁾

1996년 12월 11일 존 도이치 CIA 국장은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① 북한이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전쟁을 감행할 것이다. ② 경제적 궁핍 때문에 내부적으로 붕괴하거나 폭발한다. ③ 시간이 걸려도 평화통일을 지향할 것인가는 미확정적이다. 이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2~3년 안에 결정된다.”

49) 위의 책, pp. 78~82 참조.

26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오코노키 교수는 이러한 정세평가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내부붕괴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방·개혁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서 결론이 나게 될 시기는 5~6년후라고 보았다. 그는 평화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20년간의 개방·개혁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⁰⁾

동시에 그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과 관련,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첫째,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은 일본을 포함, 동북아시아 전체에 연쇄반응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한국경제는 통일비용의 부담이라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통일비용이 수천억 달러에서 1조억 달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통일독일 이상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동서독의 인구비가 1對 4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1對 2임을 고려할 때 한국인 2명이 북한주민 1인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은 도의적 문제 이전에 동아시아의 경제체제 방위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을 결성하는데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돌연붕괴'는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미·일·신(新)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세워야 한다.⁵¹⁾

나. 대남도발에 의한 붕괴

시가다(志方俊之) 帝京大 교수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서울기습은 3개의 루트로 집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50) 小此木政夫, “迫られる北朝鮮危機への對應: いかに「連鎖崩壊」を回避するか,” 『世界』, 1997. 9, p. 101.

51) 위의 글, pp. 108~109.

- ① 금화, 평강, 철원평야의 「철의 삼각지대」
- ② 평강에서 철원평야
- ③ 임진강, 연천(동두천), 의정부

시가다 교수는 ③루트에서 전투의 승패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울에서의 공방전을 상상하기 전에 먼저 남북 양진영의 병력배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⁵²⁾ 북한의 육군병력은 100만명으로 17개의 軍團(이중의 1개는 특수전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1, 제5, 제2의 3개 군단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그 배후에 제4군단과 전차군단이 포진하고 있다. 제3군단은 평양수비 담당이며 제7군단은 동해안 일대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 육군 병력의 약 7할이 휴전선에 언제나 기습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전방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 역시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휴전선에 육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휴전선은 동서로 248km이며 남북이 이 지역에 120만의 대군을 배치시키고 있다. 한국 육군은 3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최정예 부대인 3군(사령부 용인)은 서울 전선(前線)의 서부를 담당하고 있고, 제1군(사령부 원주)은 동부를 장악하고 있다. 제3군은 제1, 제5, 제6, 제7의 각 군단, 그리고 수도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1군에는 제3, 제2, 제8군단이 소속되어 있다. 제2군(사령부 대구)은 37도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으며, 제9와 제11의 2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제2개 군단은 전략예비부대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병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히 투입된다. 개전의 징후가 감지되면 한국정부는 예비병력을 총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육상에서 한국은 최정예 부대인 해병대를 갖고 있다.

52) 志方俊之, 「極東有事」(東京: ワレスト社, 1996), pp. 102~104. 남북 양진영의 병력배치 상황에 대한 일본측의 분석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 유사에 얼마나 치밀히 대비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28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한국의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상당히 위력적이다. 현재 한국에는 36,45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다. 3/4은 육군인데 27,5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제8군이 서울의 남부 용인에 사령부를 두고 있다. 제8군의 핵심인 제2보병 사단은 의정부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 북쪽을 방어하고 있다. 또한 M1 에이브라함스 주력전차 약 120량과 M2/3 브라토리 보병 장갑차 약 100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도 배치되어 있다.

서울 남쪽의 오산기지와 군산기지는 각각 미 공군의 제51항공단과 제8전투항공단(사령부 군산)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제3해병사단과 제1해병항공단을 출동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3해병 기동전개부대 약 20,000명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으며, 廣島현의 岩國기지도 해병대 제12항공군의 AV-8B 해리어가 있다. 座間(캠프사마)에는 미군의 제9권역 육군지역 사령부 기구가 항상 대기중에 있고 본국에서 증원부대가 도착하면 즉시 군단규모의 부대가 편성되게 준비하고 있다.

미공군은 오키나와의 嘉手納 기지와 靑森현의 三澤 기지에 전투부대를 두고 있다. 嘉手納 기지의 제18항공단은 F-15 C/D 이글을, 三澤의 제35전투항공단은 F-16 C/D 파이팅.헬콘 전투폭격기로 장비되어 있다. F-16은 동북아 산악지를 저공비행하며 폭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을 의식한 훈련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동경의 横田 기지에는 공군의 제374 항공단이 있다. 이 기지는 한국 등 극동지역 미군부대의 공수 중계지의 기능을 맡고 있고 전시에는 본국으로부터의 전투부대의 수송을 담당한다. 전쟁시 본국에서 증파될 공군부대의 제1후보는 항공전투 사령부(ACC) 제1전투항공단의 F-15C/D이다.

미해군의 제7함대도 일본을 기지로 하고 있다. 제7함대의 사령부는 육상이 아닌 横須賀에 있는 揚陸指揮艦의 함상에 있다. 横須賀 기지

를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 인디펜덴트호와 호위 순양함, 구축함, 항모전투군함(CVBG) 등이 한반도 유사시 출동할 예정이다.

시가다 교수는 북한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침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전쟁론」의 저자 K. 크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에 북한이 몰리게 되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휴전선을 침범한다. 휴전선은 서울 북측까지 60km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1주일 이내에 진격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0km는 동경 도심에서 八王子 정도의 거리이다. 북한이 운(運)이 있다면 6일 정도의 시간으로 한강까지 진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군이 항전해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 연합군은 서울을 사수한 다음 평양을 점령한 후 홍남-안주선에서 북진을 정지한다.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현 북한지도부가 전쟁에 패해 중국 국경으로 피할 경우 중국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이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중국과 접할 때 중국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이 북상할 경우 중국군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압록강의 남쪽에 진출할 것이다. 이 경우 종전(終戰)처리가 복잡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 연합군과 중국군이 직접 접촉하게 될 경우 예측불허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UN의 관리하에 두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관계국의 동의아래 북한을 남북으로 분할해서 남(南)쪽은 한국·미국, 북(北)쪽은 중국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⁵³⁾

讀賣新聞의 「安保研究會」는 미·일 양국정부가 예상하는 시뮬레이션

53) アジア軍事分析グループ21, 「アジア有事: 七つの戦争」(東京: 二見書房, 1996), pp. 113~114.

30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⁴⁾

제1단계

- 북한: ○년 ×월 북한은 국영통신사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침음모」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경계령을 내린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부근에 60~70만명의 보병부대, 전차, 장거리포를 배치한다. 북방의 부대, 항공기 등을 비무장지대로 이동시키고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활발한 군사연습을 시도한다. 해상에는 미사일 고속정 등을 한국의 근해에 파견하고 한국군을 견제한다.
- 미국: 미국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공표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지하라고 북한을 비판하면서 관계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유감성명을 발표한다. 자위대는 일본해(동해), 대마도 해협에서 초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마일한: 마일한 3국 외상이 긴급히 회담을 시작하고 중국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2단계

- 북한: 북한은 한국의 해안에 특수부대를 투입, 한국군과 교전을 시작한다.
- 마일: 마일 양국은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이송을 결정한다.
- 미국: 미해군 제7함대는 항공모함(인디펜덴스호)으로 한국 근해에 도달한다. 하와이의 보병사단 등이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하고, 본토의 전투기 F15 부대 등도 도착한다.

54) 讀賣新聞 安保研究會, 「日本は安全か: 極東有事を検證する」(東京: 廣濟堂, 1997), pp. 117~128.

- 미일: 일본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미군에 대해 일본의 민간비행장, 훈련구역·공역의 추가 제공을 결정한다.

제3단계

- 북한: 북한은 미국의 전방배치에 대해서 전쟁개시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군사활동의 확대 자세를 보인다.
- 미국: 미의회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한국을 방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 UN: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제안하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각국의 지지를 호소한다.

제4단계

- 북한: 북한은 한국의 북침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전국민동원령을 내린다.
- 미국: 미국은 추가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한국근해에 파견하고 본토 미해병대의 한·일지역 파견을 발표한다.
- 미일: 일본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① 미군의 보급·수송·정비 등 후방지원, ② 미 시설의 경계·방공, ③ 미 항공모함을 위한 호위·초계 등을 결정한다.
- 일본: 자민당의 외교·국방 합동위원회에서 외무성·방위청은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한다.

제5단계

- 사례 1: 북한은 한·미·일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자제한다. 즉 북한은 미국·한국의 도발에 편승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한·미·일은 북한이 남침기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긴장상태가 해소된다.

3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 사례 2: 한·미·일이 북한의 남침기도를 저지시키지 못하여 북한은 한국에 공격을 실시한다. 즉 제2차 한국전쟁의 시작이다. 미국은 또한 증원부대를 한국, 일본에 파견시킨다. 일본 자위대는 본격적인 경계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미군을 지원한다. 북한군은 한·미 연합군에 의해 격퇴당하고 북한은 해체된다.

「요미우리 안보연구회」는 “한·미 연합군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의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국내의 보도에 의하면 이 작전은 「신작전계획 5027」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통일까지는 5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제1단계: 전시지원 협정에 의한 미군의 신속전개
- 제2단계: 서울 북방지역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
- 제3단계: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섬멸시키고 계속해서 북진
- 제4단계: 평양을 포위·고립
- 제5단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⁵⁵⁾

오카자키 전대사는 “북한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와중에서도 전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군의 중견 간부들의 현재 분위기는 빨리 전쟁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든 지든 이러한 궁핍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⁶⁾

시카다 교수는 북한의 남침시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55) 위의 책, p. 128.

56) 1997년 8월 7일 「오카자키 연구소」 방문시 면담내용이다.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란의 경우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UN 고등난민판무관(UHCR) 사무소의 통계를 보면 최근의 분쟁에는 대개 인구의 1할 정도가 난민이 된다고 한다. 북한의 경우 인구가 2,200만명이므로 22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구 만주에 170만명 정도 조선족이 살고 있고, 이들이 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시키고 불법 월경문제의 대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220만명으로 예상되는 난민중 1할만 일본에 온다고 해도 20만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 난민 수용대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⁵⁷⁾

다케사다 역시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압도적인 육군을 갖고 있으며, 잠수함, 전차의 수도 많다. 북한은 스킵드C 미사일의 양산단계에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전투기도 숫자상으로는 한국보다 많다. 기습공격의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식량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력의 강화가 가능한가? 구(舊)소련의 예가 답이다. 구소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사력 강화와 경제난이 병행해서 존재했다. 즉 경제가 곤란하므로 오히려 군사에 힘을 쏟는다는 군산복합체의 발상이다. 그러나 전체적 군사력 면에서 북한이 남한을 압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한국지원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지원은 기대이하일 것이다. 따라서 1950년의 한국전쟁과 비교한다면 북한의 현재 조건은

57) 志方俊之, 앞의 책, p. 109.

34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국가로 북한의 남침과 쿠데타가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유사」에 대비하여야 한다.⁵⁸⁾

1997년 1월 13일 「朝日新聞」 사설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식량난과 경제 위기로 야기된 긴장을 밖으로 표출한 심각한 사건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직시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관한 「일본 주변 유사」, 즉 「한반도 유사」에 대한 유사법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朝日新聞」은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유사법체제를 마련하자고 촉구하였다.

갑작스런 통일은 한국에서의 대혼란과 아시아지역에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시게무라 논설위원은 “역사적 필연성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21세기에 통일되는 것은 틀림없으며 지금대로라면 북한이 한국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본이 통일한국과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⁵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붕괴론의 평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안정론과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및 붕괴론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주목을 끄는 점은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시각이 최근 ‘일본의 일반

58) 武貞秀士, “金王朝の内情と有事のシナリオ,” *By the way*, Aug/Sep. 1996, vol. 6, no. 5, pp. 16~20.

59) 重村智計, “21世紀 朝鮮半島の統一 シナリオ,” p. 1.

적 시각'이라는 것이다.⁶⁰⁾ 다수의 일본인들은 북한이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 등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유행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냉전종식 이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전략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에 13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人的인 안보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위한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은 '일국평화주의'를 배척하고 '적극적 국제협조주의' 등을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적극참가⁶¹⁾ 및 이를 통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ODA 제도 확대⁶²⁾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 및 정책의 선두에 선 인물이 신진당 당수 오자와(小澤一郎)로서 그는 '보통국가론'을 제시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수행, 즉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주장하였다. 오자와는 1993년 「일본개조계획」⁶³⁾이라는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1994년 2월말까지 64만부가 팔려 일본열도의 오자와붐을 형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 핵문제와 경제난 심화를 계기로 북한 장래와 한반도 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북한에 관한 일본

60) 重村智計,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p. 42.

61)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1992.10.14)과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1993.3.26)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총리자문기구인 「방위문제 간담회」도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기치 아래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朝日新聞」, 1994. 7. 19.

62)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증가목표를 제4차때 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朝日新聞」, 1993. 2. 26.

6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의 시각이 실린 잡지들이 많이 발간되었다. 예를 들면 神谷不二, “金王朝終末と東 アジア,” 「諸君」(1994. 9); 安鳳善·深田祐介, “95金王朝崩壞のシナリオ,” 文藝春秋(1994. 9); 武貞秀士, “金王朝の内情と有事のシナリオ,” By the way, vol. 6, no. 5(Aug/Sep 1996) 등이다.

한반도 유사에 대한 저서로는 田岡俊次の 「戰略の條件」(東京: 悠飛社, 1994); アジア軍事分析グループ21(石川潤等), 「アジア有事: セつの戦争」(東京: 二見書房, 1996); 北川廣知의 「朝鮮有事はあるのか」(東京: 緑風出版, 1996) 등이 출판되었다.

언론에서는 「日本經濟新聞」이 1995년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안전보장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연재기획으로 북한의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정치가 및 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토 오(伊藤) 사민당 정무심사회장에게는 “북한의 군사편중 국가체제를 어떻게 보느냐”(7.16), 하토야마(鳩山) 사키가케 대표간사(현 민주당 대표)에게는 “체제가 다른 점을 전제로 하나 상호이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하토야마 대표간사는 식량난을 예로 들어 북한의 쌀지원은 체제를 넘어 상호신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7.18). 宮澤 전(前)수상에게는 “북한의 붕괴가 다가온다는 시각이 있다”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붕괴에 대해 무엇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면 인접개국, 특히 일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라는 재질문에 그는 “대응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7.25)라고 답변하였다.

「日本經濟新聞」은 다나카(田中明彦) 東京大 교수를 등장시켜 “북한의 체제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왜 변하지 않는 국가인가”라는 질문과 “북한이 판단을 잘못할까 걱정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개정

의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8.1)는 등의 재질문을 하였다. 이에 관해 다나카 교수는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상황을 고려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헌법개정도 하여야 한다”(8.2)고 주장하였다.

상기와 같은 「日本經濟新聞」의 논조와 유사하게 「讀賣新聞」도 일본의 유사체제를 선도하였다. 1995년 8월 16일 「讀賣新聞」 1면 톱기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며 또한 「일본 주변사태의 대응」, 「시물레이숀: 한반도긴장」 등이다. 시물레이숀은 전술한 바와 같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제5단계는 “북한은 한국 공격을 개시한다, 즉 제2차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주변사태의 대응」 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설기사가 있으며, “정부·여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유사에 대해 일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讀賣新聞」 8월 18일자 해설기사는 “한반도 유사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 법제(法制)를 빨리 완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讀賣新聞」은 이미 7월 18일 1면 톱기사에 「유사시 統幕의 조정 권한 확대: 방위청 검토」, 2면에는 해설기사로 「統幕의 권한 확대: 주변유사시」를 각각 게재한 바 있었다. 즉 일본 방위청은 오래 전부터 현안인 統合幕僚會議의 三自衛隊에 대한 조정권한을 확대하고 싶은 기본방침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구실로써 일본 주변유사, 특히 한반도 유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시모토 수상은 1996년 4월 17일 발표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외무성의 折田 북미국장, 방위청의 秋山 방위국장 등에게 “일본에 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취할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상정하여 연구·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

하였다. 구체적인 검토항목으로는 ① 재외일본인의 구출, ② 대량난민 대책, ③ 연안경비·테러 대책, ④ 미군의 후방지원 업무 등을 열거하였다.⁶⁴⁾ 하시모토 수상은 또한 9월 17일 각료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유사를 염두에 둔 유사연구에 대해서도 내각 안전보장실과의 협의를 지시하였다.⁶⁵⁾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신문들은 하시모토 정권이 구상하는 유사체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서 특필하는 한편, 이를 선도하였다.⁶⁶⁾ 특히 8월 8일 가지야마(梶山) 官房長官은 日經連 주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망언을 하였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유사 발생할 경우 대량난민이 일본에 들어온다. 이 경우 위장 난민도 유입될 수 있다. 그들은 무기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들은 남북한내에 조직이 있다. 일본에서 그들의 내분상태가 일어날 경우 일본의 자위대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러한 경우 정말 일본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이와 같은 가지야마 망언을 일면에서 대서 특필하였다. 가지야마 망언의 진의는 한반도 유사시 먼저 재일한국인의 관리·법체제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탈냉전시대에 정치대국화를 위해 소위 ‘한반도 유사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연구하여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방위백서」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군사동향, 일본정부 수뇌의 언동, 학자와 평론가의 기고문, 그리고 언론의 보도자세 등을 통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讀賣新聞』, 1996. 5. 13.

65) 『讀賣新聞』, 1996. 9. 17.

66) 北川廣和, 『朝鮮有事はあるのか』(東京: 綠風出版, 1996), p. 170.

V. 결론

북한장래와 관련된 일본의 시각은 안정론, 변화속의 국가존속론, 붕괴론으로 대별된다. 일부 안정론자들은 사회주의체제하의 김정일 정권이 강력한 노동당 조직과 주민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경찰력을 갖고 있으며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익숙하기 때문에 안정·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안정론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국익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희망하지 않고 있고 한국마저도 통일비용의 감당 능력 부족 때문에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정론과 붕괴론의 절충론으로서 변화속의 국가존속론은 김정일이 군을 잘 통제하면서 경제를 현상유지시키고 대미·일 외교를 잘 처리해 나간다는 주장이다. 즉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제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를 그럭저럭 존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존속근거로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및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외부의 대북지원과 경험 등 경제적 이유를 중요시한다.

반면 일부의 일본인들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위기의식과 자신감 상실, 당·정·군(黨·政·軍) 조직의 이완현상으로 인한 주체사상의 정당성 약화·소멸, 이에 의한 사회의 변화와 개혁·개방 정책노선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및 이해집단 간의 갈등 등이 북한내부로부터의 폭발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으로부터의 폭발은 밑으로부터의 불만·저항에 힘입어 주민폭동 내지는 위로부터의 반란 또는 군부쿠데타와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

40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이 있다고 본다. 붕괴론자들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새 정권 역시 외부사조에 젖은 주민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북한이 내부 폭발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체제 및 국가 붕괴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관한 일본 군사평론가, 학자, 讀賣新聞社 「안보연구회」의 시물레이숀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북한의 남침 및 붕괴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리적으로 한국에 인접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이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이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새로 만들기 위해 상정한 한반도 및 대만 유사를 일본의 역할확대, 즉 정치대국화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日本經濟新聞」과 「讀賣新聞」의 기획기사와 「안보연구회」의 북한 남침시나리오, 그리고 「諸君」, 「世界」 등의 북한붕괴 관련 논문들은 일본정부가 한반도 유사대비체제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론을 선도(先導)하였다고 분석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아시아軍事分析グループ21 (石川潤 等). 「アジア有事: 七つの戦争」. 東京: 二見書房, 1996.
- 아시아軍事分析グループ21. 「アジア有事: 七つの戦争」. 東京: 二見書房, 1996.
- 岡崎久彦·中嶋嶺雄. 「日本にアジア戦略はあるのか」. 東京: PHP研究所, 1996.
- 讀賣新聞 安保研究會. 「日本は安全か: 極東有事を検證する」. 東京: 廣濟堂, 1997.
- 福田恒存. 「新聞のすてて」. 東京: 高木書房, 1975.
- 北川廣和. 「朝鮮有事は あるのか」. 東京: 綠風出版, 1996.
- 小谷豪治郎. 「東アジア再編: 日本の戦略」. 東京: 日刊工業新聞社, 1997.
- 日本防衛研究所. 「東アジア戦略概観 1996-1997」. 東京: 防衛研究所, 1997.
- 日本學術協力財團 編. 「冷戦後のアジアの安全保障」. 東京: 日本學術協力財團, 1997.
- 長谷川 慶太郎·佐藤勝巳. 「北朝鮮崩壊と日本」. 東京: 光文社, 1996.
- _____ . 「北朝鮮崩壊と日本」. 東京: 光文社, 1997.
- 重村智計 著. 신지호 옮김.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 지식공작소, 1997.
- 重村智計. 「北朝鮮 データブック」. 東京: 諸談社, 1997.
- 方燦榮·重村智計. 「北朝鮮崩壊せず」. 東京: 光文社, 1996.

4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志方俊之. 「極東有事」. 東京: ワレスト社, 1996.

片岡正巳. 「朝日の論調ごごが納得できない」. 東京: 日新報道, 1981.

Halloran, Richard. *Japan: Images and Realities*. New York: Alfred, A. Knope, 1969.

2. 논문

김성철. “김일성 정권의 변화전망.” 「김정일 정권의 향방」. 민족통일 연구원 제18회 국내학술회의, 1995.

鈴木昌丸. “北朝鮮・金正日體制の今そこにある危機.” 「世界週報」, 1997. 12. 9.

關川夏央. “新興宗教國家・北朝鮮.” 「諸君」, 1994. 9.

武貞秀士. “金王朝の内情と有事のシナリオ.” *By the way*, Aug/Sep. 1996, vol. 6, no. 5.

_____. “金王朝の内情とのシナリオ.” *By the way*, vol. 6, no. 5, Aug/Sep., 1996.

小牧輝夫. “喪明けて對話攻勢に向かう北朝鮮.” 「世界週報」, 1997. 8. 12.

小此木政夫. “迫られる北朝鮮危機への對應.” 「世界」, 1997. 9.

_____. “迫られる北朝鮮危機への對應: いか「連鎖崩壊」を回避するか.” 「世界」, 1997. 9.

神谷不二. “金王朝終末と東アジア.” 「諸君」, 1994. 9.

_____. “北朝鮮につけこまれるな.” 「諸君」, 1997. 5.

安鳳善・深田祐介. “'95 金王朝崩壊のシナリオ.” 「文藝春秋」, 1994. 9.

伊豆見元. “일본의 대북한 정책.” 「평화논총」, 1997, 봄·여름.

田中 明・佐藤勝己. “金正日體制の崩壊は早い.” 「諸君」, 1994. 9.

- 趙甲濟·黒田勝弘. “韓國は南北統一を望んでいない.” 「中央公論」, 1992. 1.
- 佐藤勝己. “金正日に實權はない.” 「諸君」, 1994. 10.
- 佐藤勝己·田中 明. “北朝鮮「安定論」の虚妄を挑す.” 「諸君」, 1996. 7.
- 重村智計. “21世紀 朝鮮半島の統一 シナリオ.” 「東Asia Review」,
1997. 6.
- _____. “北朝鮮崩壊論, 軟着陸論の見當違い.” 「中央公論」, 1997. 8.
- _____. “戰略的 朝鮮半島論議のすすめ.” 「中央公論」, 1997. 8.
- 黒田勝弘. “金正日は「神」には なれない.” 「文藝春秋」, 1990. 9.
- Easton, David.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 Fall 1973.

3. 기 타

- 「世界日報」.
- 「朝鮮日報」.
- 「讀賣新聞」.
- 「毎日新聞」.
- 「産經新聞」.
- 「日本經濟新聞」.
- 「朝日新聞」.

< 부 록 >

北朝鮮は、韓国経済に大きく水を割られた。

さらにこの通の崩壊と中国の崩壊・改革開放によって、背後からの支えを失った。その結果「一分断を固定化する」として反対して来た国連への南北同時加盟にも踏み切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

こうした事態を打開するには高麗のリーダーである米国の国交正常化しかない。金正日は考えそのであらう。核不拡散条約(NPT)への加盟表明から始まった対決姿勢を、カーター助朝で対峙へと転換した金正日の狙いは、米国の国際政策に大して自らの死後の金正日体制を維持することにあったにちがいない。

金正日の死後、北朝鮮の後継指導部が何よりも考えねばならないのは、朝鮮半島の平和の維持である。これがアジアの平和、ひいては世界の平和につながるのだ。

金正日が最後打ち出した「対朝一路線を継承し、国際的に協調して行く以外に道はない。内外に開かれた」「指導一路線」の通用する道なることが大いれた。

対話の道を閉ざすな

国際社会は北朝鮮にたいして対処すべきだ。第二に、金正日がした「対話」への決断を、後継政権が引き継ぎたいと主張

境を築かなくては、金正日の死による北朝鮮の窮乏にひき込んで、北方を占める勢力に併呑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いま韓国や米軍が、この機に進んで北朝鮮を攻撃するといふ時代ではない。果た、中国やロシアが北朝鮮の凶威に干渉するつもりなことも考えられない。こうした状況を北朝鮮が共有するまでは、個個態度に努めるべきだ。そして、北朝鮮の後継政権が対話路線を維持して、いざさらなる世界舞台をめぐっていかねばならない。

第三に、当面は、始まったばかりの米朝会談を精進し、北朝鮮の新指導部の考えを大く慮らなくては、突然の事態が紛争や騒ぎに両かわないよう、時間をかけて話し合いを続ける必要がある。

第四に、南北首脳会談の延期はむしろ考えないにせよ、せっかく決まった首脳対話の道は閉ざさずにつとめなくては、北朝鮮からも、金正日が開いた道をあえて破壊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

わが国と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交渉は中断したままになっているが、カーター大統領任せれば、金正日は再開に意欲的であろう。日朝の正常化はアジアの平和を築く大きな道であり、交渉再開の道を築くべきだ。北朝鮮の変化の兆しに敏感に反応して欲し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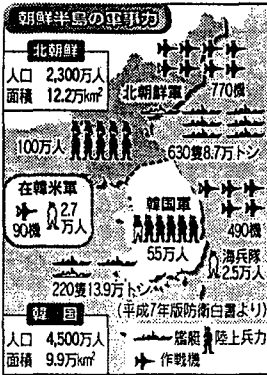
2.27

北朝鮮情勢を懸念

政府、有事対策を再検討

政府は朝鮮民主主義人民 急速に浮上。水面下では九 共和国(北朝鮮)情勢の不 透明化に懸念を強めてい る。構造的な食糧・エネルギー不足による経済危機の 深刻化に加え、相次ぐ人命 事件や首都平壤でのろ城 ・銃撃事件など「統制力の 弱体化の兆候」が目立つよ うになり、政府内では北 朝鮮は中長期的な体制崩壊 過程に入った」との見方が

「北朝鮮の内部で何かが 起こっているのは間違いな い」―ある外務省幹部は 北朝鮮情勢についてこう断 言する。金正日書記の前妻 の西側への脱出に象徴され



るように、北朝鮮では最近、 朝鮮労働党の幹部や政府高 官の一族など「特権層」の 亡命が続出。「鉄の統制」 とも評されるほどの厳しい 国民監視・内部統制を敷い ている北朝鮮では「かつて は想像できない事態」であ

故金正日成主席の死去から 一年半以上経過したにもか からず、金書記が国家主席 にも党総書記にも就任し ないことにしても、外務 省は「経済状況の悪化が深 刻で、就任しようにも就任 できないのが実態を分析 金書記は実質的に権力を継 承しているもの」とその基 盤は盤石ではない」との見 方が多い。

北朝鮮は現在なお百万人 の陸上兵力を維持してお り、「体制崩壊の混乱の中 の軍の暴走」「防衛幹部」 を懸念する向きもある。 こうした事態を踏まえ、政 府は年初末、北朝鮮有事に 備えた検討作業を非公式に 開始した。

北朝鮮の核開発問題をめ ぐって緊張が高まった九四 年春から夏にかけて、政府 は朝鮮半島有事の危機対処 シナリオをひそかに策定し た実績がある。日本から北 朝鮮への送金停止問題か ら、米軍が出動した際の自 衛隊による後方支援のあり 方まで幅広く検討したが、 米朝合意によって北朝鮮の 核問題は一転解決に向か い、シナリオは「お蔵入り」 となっていた。

前提としていた。今回のケ ースは北朝鮮の「自然崩落 的な体制崩壊」を想定した ものだけに、北朝鮮軍の動 向や難民問題など不測の要 素が多く、中国の対応も不 透明なことから、シナリオ の策定作業は難航が予想さ れる。

九四年当時のシナリオは 北朝鮮が国連安保理の決議 に従わず、日米韓が経済制 裁を実施した場合の対応を

社説 朝日

「北の飢え」は現実の脅威だ

極度の飢饉が北朝鮮各地に蔓延する恐れが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食糧不足がますます深刻になりつつある。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北朝鮮の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食糧不足は、北朝鮮の食糧不足を招いた世界食糧計画(WFP)の報告書から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朝日

社説

朝鮮半島の緊張を和らげる道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朝鮮)の潜水艦投入事件で高まる、北朝鮮半島の緊張に、緩和の兆しが見え始めた。

北朝鮮政府は、事件への一歩、進展の「区」の表明に続き、米韓両国が提唱した南北朝鮮と米中による四方四益の説明会に参加すると表明した。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発機構(KEDO)の間でも、惟水が、建設準備のための議定書に調印し、米英は三月下旬に再び動き出した。

米政府は北朝鮮に対する穀物輸出の承認を発表、米朝最高官会談を近く開催する。オムブズマン次官閣内務長官は、KEDOの枠組みと対話を軸とした北朝鮮政策を継続することを明確にした。

事件後、四防下京の増大や経済関係の段階的な凍結など北朝鮮策を打ち出した韓国政府にも、ひとまず今後の北朝鮮の出方を待とうという姿勢が見て取れる。

これらの動きは、食糧難と経済危機に苦しむ北朝鮮、これ以上の緊張の悪化を避けない韓国、北朝鮮の急激な体制崩壊を懸念する米国の間の微妙なバランスのうえで成り立った妥協によるものだろう。

しかし、事態は投入事件以前に戻ったに過ぎない。これに四方四益会談や惟水加工に確かな進展が数かれ、緊張緩和が現実化するかどうか、妥協はできる。

北朝鮮の行き方は不透明だが、金正日書記が国家主席に就任するのはいつなのか。四防を突に掌握できるのか、食糧やエネルギー不足が国民の不満を呼び、それをそらすために軍事的な動きに出るとはしないのか、その懸念は続く。

四方四益会談でも、北朝鮮は在韓米軍の撤退を強硬にするという条件を変更して、いなし、現在の休戦協定の枠組みを放棄しようとする態度にも変化はない。

韓国側も、今年十二月に政権交代のための選挙を控え金泳三大統領が政治的な權威を守ろうとすれば、一方に有利な姿勢はとりにくい。北朝鮮政策をめぐる米韓のすれは消えていない。

そうであればなら、緊張をほぐすための日本の外交努力が重要になる。

それには、まず北朝鮮を迫りつめないことである。北朝鮮の暴乱や軍事行動に出るような事態を防ぎながら、対外開放と南北

関係の改善、軍事政策の是正を促し、半島の安定に結び付ける。それが日本の平和に欠かせないからだ。

北朝鮮にとっては、対外関係を広げ、経済を再建する以外に舞臺を打倒する近道はない。それを促進するものなら、国際社会と協調した変換はためるべきではない。

同時に、韓国との間で緊張緩和のための努力について敵愾疎遠をもっと強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韓間には竹島問題や歴史認識問題がある。だが、朝鮮半島の緊張緩和と成り兼ねる大韓の利益である。

そのためにそれぞれ何をなすべきなのか。必要なのは、「四防」の懸案を和らげ、切な一歩とした。

既に語り合える互いの信頼関係だ。日朝交渉の再開も、日韓の緊密な敵意妥協を前提に考えられるべきだろう。

これらの努力を要し、「朝鮮有事」の危機感ばかりを言いつのつても、むしろ逆効果だ。日米間は、日本四防有事に備えた防衛協力指針の見直しを本格化する。憲法をはじめ法制度の順守は互うのことで、半島の安定を迷損ならざるのたいよう、周到な外交的配慮も必要である。

朝鮮半島の安定化という息の長い作業を支え続けることが日本の役割だ。今月下旬に別紙で行われる日韓首脳会談で、その大切な一歩とした。

朝日

社 説

北朝鮮は現実を直視すべきだ

北朝鮮は韓国に命を求め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朝鮮)の最高指導者、朝鮮労働党副総書記の身命の取り扱いをめぐって、韓国と北朝鮮、北朝鮮、米国のかけひきが続いている。

黄禹暉氏が保護されている北朝鮮の韓国大使館前部の周辺は、ものもしい緊張感と勢が散れ、北朝鮮大使館の車が威嚇行動を繰り返した。韓国国内では、北朝鮮から亡命した金正日(金正日)の命をめぐって、米国の要請がけん銃で撃たれるという事件が発生した。

いま大筋なのは、当事者が冷静さを取り戻し、実現可能な解決の道を探ることだ。いかなる危機感や敵愾心をおおる行為も、誰にも許まなければならない。テロも「第一歩」をむかひたは論外である。韓国の朝鮮門はもとより、黄禹暉氏は、亡命前に死んだと見做らなければならない。

南北の対立は、資本主義と封建主義の対立だ。人民が死んで死ぬ社会を、どうして社会主義といえるか。

現在の状況では、戦争以外に出口がない。戦争をどう未然に防ぐか。

首脳から腹するには、韓国や国際社会も話し、平和を求めていくべき道はない。黄禹暉は亡くなったのだ。

しかし彼の朝鮮は、金正日(金正日)の周辺から「特別特赦令」といふ名の特赦令はかけられた。

そうたすれば、北朝鮮は改革・開放と平和的外交の可能性を、みずから探めてしまったことになる。

よく考えたい。

冷戦時代は終わり、北朝鮮をとりまく情勢は一変した。北朝鮮が軍事的行動に出て、中国もロシアも支援するはずがない。燃料にもっと多く北朝鮮軍が韓国軍と在韓米軍の軍需品を上回るにはどうも考えられない。核開発競争が国際的孤立をこれだけ深めたことか。

北朝鮮の食糧不足は、一時的な国際食糧援助では解決しない。水増地では耕地が土砂に覆われて使えないという。農産政策の根本的な改革なしには、慢性的な飢饉からの脱出は不可能である。

北朝鮮の指導者は、どうして現実を直視すべきだ。

すべきだ。

今度の事件は、北朝鮮にとって大きなショックだったといえるが、これを機会に、国内の困難な状況をいかに改善するか、その方策を真剣に考えるべきである。

一方、韓国の金泳三大統領も、黄禹暉の亡命を国政に利用してはならない。黄禹暉の亡命に、国家安全企画部(国家安全部)の影が見え隠れする。

かつて軍事政権下の韓国で民非花壇に植栽を奨励した安企部は、金泳三政権の登場で、その規模を縮小させた。しかし、潜水艦投入事件など、韓国内に北朝鮮の核開発が活まり、安企部の権限を強化する

法廷が、強行検査を成立した。

この事件が安企部強化の強い風になっていく。これによって、これまで来た民主化の流れが逆流するのを恐れる。

中国は南北対立のはざまで揺蕩している。しかし、再戦後外務次官が黄禹暉と会い、中国の希望を明確にしたのである。国際的精神に従い、本人の意思は十分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米國はこの事件に慎重な態度をとっている。日本も事態を冷静に見守りながら、解決に向けて、四隣国と協力すべきだ。この事件によって、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全を危険にさらしてはならない。

社説

黄氏出国を機に緊張緩和を

韓国への生命を求めた北朝鮮民主主義人民軍(北朝鮮)の黄長将、朝鮮労働党幹部が、中国を出国した。行き先は、アメリカに送られた。これは、北朝鮮が、北朝鮮に送られた。北朝鮮に送られた。北朝鮮に送られた。

黄長が北京の韓国大使館の加平部に駆け込んでから一カ月あまり、南北間の緊張は、いよいよ高まったが、とりえずこれら最悪の事態は回避された。

中に立った中国が、国際慣例のとおりに、南北双方の顔が立つような経過を時間をかけて探ったこと、米朝が不介入の姿勢をとり、国際慣例を通じての食糧協力を表明したことが、解決につながった。

関係各国の冷静な対応を評価したい。しかし、これは朝鮮半島の緊張緩和にすぎない。小さなハードルを越えたに過ぎない。むしろこの事件の解決を契機に、緊張緩和の雰囲気をつくってほしい。

今度の事件を通じて、北朝鮮幹部の二つの面が浮き彫りになった。一つは、深刻な経済危機に直面した北朝鮮は、場合によっては、かなり現実的な政策をとる可能性がある。

亡命直後には、黄氏は「拉致された」と主張した北朝鮮は、米中の態度にちなみながら、要諦を「入らなければ行け」と、拉致の第三国への出国を誘導する方向へ転じた。

また、鮮水痘感染のために朝鮮半島にルギー隔離構構(LEDR)が派遣する要請を受け入れた。この中には韓国人技術員が含まれている。

一面の運動から、北朝鮮が米朝ジュネーブ合戦の枠組みを離れず、米朝との関係改善を追求している姿が読み取れる。

だが、もう一つの面は、北朝鮮の指導部内で金正日総書記への服従を求める「赤旗思想」が強まり、金養虎の親政の急合いが濃くなっていることである。相次ぐ軍トランプの拒否も首相の更迭は、世代交代の進行と開放派批判の高まりをうかがわせる。

これは、北朝鮮がどんな方向に進んでいくかを、一段と透明にする要因である。金養虎の親政で、突然、緊張が厳化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くかを、一段と透明にする要因である。金養虎の親政で、突然、緊張が厳化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朝鮮半島をめぐる国際関係を図式化すれば、北朝鮮は、上下に北朝鮮と韓国、左右に中国と米朝がある。中朝系は軍事同盟で結ばれている。中韓は国交を正常化し、米朝も関係改善に向かっている。米中は前回の相互訪問が決まった。

そんな中で、ただ一つ、南北関係だけが緊張したままだ。この改善が急務である。もし韓国が黄氏の生命を政治的に利用するようになるとすれば、南北関係はさらに悪化するだろう。それは韓国にとって最もよくないことである。

日本はもう一度、協力を果たすべきか。米朝に対して韓国も、国際慣例を通じて北朝鮮への食糧支援を決めた。しかし日本は国際慣例の呼び掛けに反応していない。十九年前、新潟で起こった女子学生を拉致疑惑のためたといわれている。

北朝鮮は拉致を容認するが、政府は真相究明のため韓国に協力を求めるべきだ。とはいえ、軌えている人々を救済のための食糧支援は、拉致疑惑とは別の問題として対応するべきだろう。日本は米朝と協同歩調をとり、緊張緩和の雰囲気づくりに貢献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계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의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p>■ 북한인권백서</p>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7,000원
Regime Sustainability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6,500원
and Proposals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FAX:901-2547)

